

의안 번호	754
----------	-----

##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자원화 1차시설 용도폐지의 건 검 토 보 고 서

### 1. 검토경과

- 제 출 일 자 : 2010. 3. 10(수)
- 제 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위원회회부 : 2010. 3. 11(목)
- 위원회심사 : 2010. 3. 19(금)

### 2. 제안이유

-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자원화 1차시설의 민자운영(BTO) 기간 종료와 시설물 인수 후 시설운영 전반을 분석한 결과, 보수하여 가동하는 것 보단 폐쇄하는 것이 타당하여, 공공시설 용도 폐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,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중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○ 1차 시설은 2001년도부터 자원화 시설로 운영하였으나,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검사 규정이 신설되어 자원화 시설 설치검사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2006년도부터 감량화 시설로 운영하였으며,

○ 감량화 시설 운영에 따라 2009년도 감사원 감사시 재활용을 저조로 지적을 받았으며, 감량화 시설 운영도 현재로는 건조시설 등 부적합으로 운영할 수 없음

- 감량화 시설 운영 사유 : 발효조 용량 미달( $65.4\text{m}^3 \Rightarrow 150\text{m}^3$ ) 및 후부숙조 시설 없음

○ 1차시설 보강시 예산 과다 소요 : 20억 이상 소요 예측  
- 시설보강 내역 : 발효조 용량 확대, 후부숙조 설치, 건조기 보수 등 시설 노후에 따른 전체적으로 시설 진단 및 보수 필요

○ 울산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1일 발생량은 265톤이며 공공시설인 용연시설(SBK) 180톤, 중구 2차시설 53톤, 성암소각장 32톤, 총 265톤으로 중구 1차시설 가동시에도 반입할 물량이 없으므로 시설 폐쇄를 결정코자 함

**※ 용도폐지 대상 공공시설 현황**

- 시설명 :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 자원화 1차 시설
- 위치 : 울산광역시 남구 성암동 150-1(환경자원사업소 내)
- 사업비 : 사업비 : 2,253백만원(국 630, 시 735, 민 888)
- 면적 : 부지 3,229㎡, 건물 907㎡
- 준공일자 : 2001년 8월 30일
- 시설규모 및 처리방식 : 50톤/일, 퇴비화
- 민자운영기간 : 2001. 8. 30 ~ 2009. 12. 4(처리물량 144,179톤 처리)

※ 운영자 : 울경환경(주) 대표이사 이건축

**4. 용도폐지 후 공공시설 재산조치**

- 토지(시유지), 건물(중구 소유) : 2차시설 부속시설로 활용
- 기계설비 : 불용 결정하여 매각

**5. 근거법규**

- 「지방자치법 제39조, 같은법 시행령 제36조」

**6. 검토의견**

- 본 공공시설 용도폐지의 건은, 2001년도에 우리 중구에서 BTO(수익형 민자사업)사업으로 설치한 ‘음식물자원화 1차시설’이 민자운영기간 종료로 인수하였으나, 본 시설을 재가동시 시설노후로 보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며, 시에서 금년4

월 완공예정으로 대규모 음식물 처리시설을 건설 중에 있어, 우리 구에서 본 시설 운영의 필요성이 없으므로,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용도폐지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

○ 공공시설의 용도폐지는 같은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임으로, 이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.

○ 본 공공시설의 용도폐지 주요 내용은

- 우리 중구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, 2001년도에 남구 성암동 울산광역시 환경자원사업소 부지 내에 설치한 “중구 음식물 자원화 1차시설”의 민자운영기간이 2009. 12. 4일자로 종료 되어, 본 시설을 중구에서 인수 하였으나,
- 본 시설을 재가동시 노후시설 보강비가 20억원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, 이러한 사항은 그간 운영해온 민자운영업체에서도, 보수비 과다로 노후시설을 보수하지 못하고 대체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였다고 함
- 또한 울산광역시에서 시 관내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전량을 처리하기 위해 건설 중인 용연 음식물처리 공공시설(SBK)’이 금년 4월 준공이 되면 우리 중구의 2차시설과 성암 소각장 시설 등으로도 시 관내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가 충분히 처리될 것임.

○ 따라서 우리 중구의 ‘음식물자원화 1차시설’은 공공시설 용도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○ 다만 본 시설 용도폐지 후 건물은 2차음식물 처리시설의 부속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며, 기계 설비는 불용결정 후 매각

처분 계획인바, 이에 대한 부속시설 세부 활용계획과 이러한 기계 설비의 수요처가 있는지 등 매각계획의 세부설명이 요구됨.

## 지방자치법

제39조 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조례의 제정·개정 및 폐지
  2. 예산의 심의·확정
  3. 결산의 승인
  4.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·수수료·분담금·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
  5. 기금의 설치·운용
  6. [대통령령으로 정하는](#)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
  7. [대통령령으로 정하는](#) 공공시설의 설치·처분
  8.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
  9. 청원의 수리와 처리
  10.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
  11.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36조 (중요 재산, 공공시설의 취득·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) ① [법 제39조제1항제6호](#)에서 “[대통령령으로 정하는](#)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”이란 「[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](#)」 [제7조제1항](#)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을 말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[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](#)」 [제7조제2항](#)에 해당하면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③ [법 제39조제1항제7호](#)에서 “[대통령령으로 정하는](#) 공공시설의 설치·처분”이란 [법 제144조](#)에 따라 조례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신·증설, 용도폐지·변경 및 공공시설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(讓與)하는 경우를 말한다.

④ [법 제39조제1항제6호](#) 및 제7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으면 [법 제39조제1항제6호](#)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.

⑤ [법 제39조제1항제6호](#)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이나 공공시설의 설치·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거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[법 제39조제1항제6호](#)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.